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100003-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4
<https://kostat.go.kr/asdk/> 2024



통계청
통계개발원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근 10년간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범죄의 감소에 원인이 있다. 강력범죄는 증가 추세인 반면, 교통범죄와 폭력범죄는 감소 추세이며, 재산범죄는 소폭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범죄 등 5대 강력범죄 중에서는 성폭력 범죄만이 증가 추세이다. 2022년에는 형법범죄 증가로(전년 대비 9.4%) 전체 범죄는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의 살인범죄 발생률과 여성 살해 발생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 최근 20년간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남성과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노인층의 감소 폭이 크다. 다만, 2022~2023년 기간에 외인 사망률이 소폭 증가하였다.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은 2018~2019년과 2022년에 소폭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나,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지난 20년간 화재 발생 건수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건축물 등의 재산 가치 증가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꾸준히 늘어났다. 2023년에는 화재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감소했다.
- 일반 국민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으나,

2024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안전은 크게 사회적 안전과 자연재난, 인적 사고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범죄와 테러, 자살 등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범죄발생 현황과 범죄피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으로 지진, 산사태, 황사, 태풍, 호우 및 폭설, 감염병 등이 속한다. 이 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다루었다. 인적 사고는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의 결과로 시설물, 설비, 기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간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생하는 사고, 화학물질이나 에너지에 의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속한다. 이 글에서는 사고로 인한 사망, 화재, 교통사고를 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범죄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지표인 경찰력과 소방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확인하였다.



범죄(사회적 안전)

범죄발생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로 나타내는데, 2013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3,90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21년에는 2,966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다만, 2022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3,062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여 향후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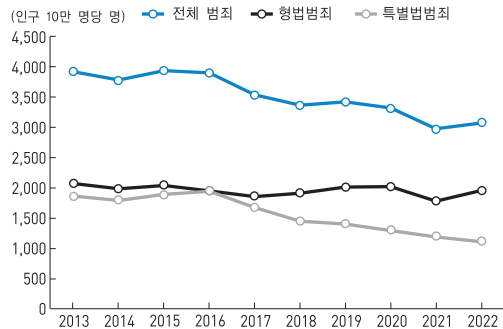
범죄는 형법범죄(살인, 강도, 폭행, 강간, 방화, 절도, 사기, 배임, 위조 등)와 특별법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성된다. 2010년 이전에는 특별법범죄율이 형법범죄율보다 높았으나, 2011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어 형법범죄율이 특별법범죄율을 지속 상회하고 있다.

형법범죄율은 지난 10년간 소폭의 증감이 반복되기는 하였으나, 2013년 인구 10만 명당 2,066건에서 2022년 1,952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특별법범죄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는데, 2013년 인구 10만 명당 1,837건에서 2022년 1,110건으로 줄었다. 따라서 전체 범죄의 감소 현상은 특별법범죄의 감소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한편, 범죄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57만 5,007건

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형법범죄는 100만 3,883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한 반면, 특별법범죄는 57만 1,124건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하였다(그림 X-1).

[그림 X-1] 형법 및 특별법 범죄율, 2013~2022



주: 1) 범죄율=해당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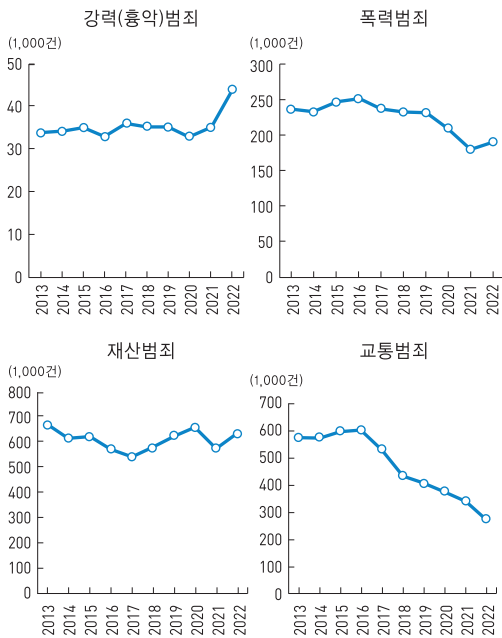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 발생 추이가 상이하다. 지난 10년간 강력(흉악)범죄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교통범죄와 폭력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산범죄는 소폭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강력(흉악)범죄는 2013년 3만 3,787건에서 2022년 4만 3,927건으로 최근 10년간 30.0% 증가하였다. 반면, 교통범죄는 2013년 57만 4,398건에서 2016년 60만 970건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27만 3,745건으로 10년 전에 비하여 52.3% 줄었다. 폭력범죄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으로 2013년 23만 7,553건에서 2022년 19만 870건으로 19.7%가 줄었다. 재산

범죄는 2013년 66만 7,214건에서 2017년 54만 2,336건으로 감소했으나 그 후 다시 증가하였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63만 4,864건으로 10년 전 대비 4.8% 감소한 셈이다. 2022년의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을 전년 대비하여 비교해보면, 교통범죄는 19.6% 감소한 반면, 강력(흉악)범죄는 25.1%, 재산범죄는 10.3%, 폭력범죄는 5.8% 증가하였다(그림 X-2).

[그림 X-2] 주요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 2013-2022



- 주: 1) 강력(흉악)범죄는 형법범죄 중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 등을 포함함.
- 2) 폭력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 등을 포함함.
- 3) 재산범죄는 형법범죄 중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 등을 포함함.
-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위반범죄와 교통방해죄를 포함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의 주요 강력범죄 죄명별로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성폭력범죄만이 10년 전에 비하여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살인범죄와 강도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폭행·상해범죄와 방화범죄 역시 소폭의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성폭력범죄는 2018년 이후 증가세가 멈추고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2021년부터 다시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폭이 크다. 다만, 이러한 성폭력범죄 증가 현상은 실제 발생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신고율 증가에 따라 숨은 범죄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2022년에는 5개 강력범죄 모두 전년 대비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는데, 성폭력범죄의 증가 폭이 가장 커서 전년 대비 25.9% 증가했고, 다음으로 방화 19.4%, 살인 6.6%, 폭행·상해 5.4%, 강도 4.1%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표 X-1).

<표 X-1> 주요 강력범죄별 발생 건수, 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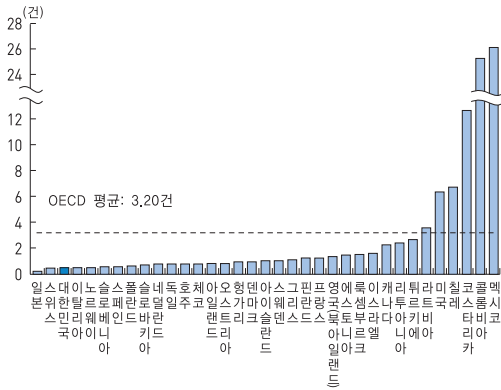
연도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2013	959	2,001	29,097	1,730	219,805
2014	938	1,618	29,863	1,707	214,605
2015	958	1,472	31,063	1,646	226,543
2016	948	1,181	29,357	1,477	228,710
2017	858	990	32,824	1,358	215,717
2018	849	841	32,104	1,478	208,935
2019	847	845	32,029	1,345	203,074
2020	805	692	30,105	1,210	180,604
2021	692	511	32,898	1,025	151,586
2022	738	532	41,433	1,224	159,741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2022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평균 3.20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살인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0.53건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을 뿐 아니라, 일본(0.23건), 스위스(0.48건)에 이어 살인범죄율이 세 번째로 낮은 국가이다. 반면 멕시코는 인구 10만 명당 26.11건으로 인구 대비 살인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콜롬비아(25.27건)와 코스타리카(12.66건)가 그다음 순위이다. 그 외에도 칠레(6.74건), 미국(6.38건), 라트비아(3.62건)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X-3).

[그림 X-3]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발생 건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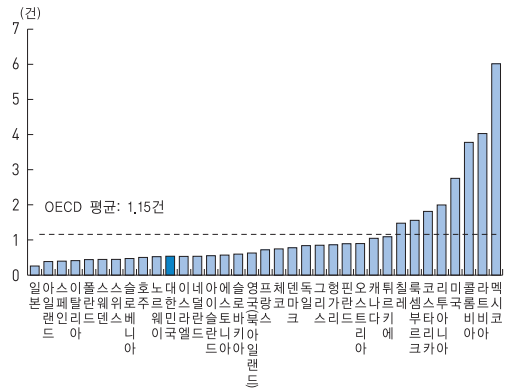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자료가 없는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을 제외한 35개국 평균임.
출처: UNODC, *United Nations Crime Trends Survey*, 2022.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 살해가 여성 살해보다 많이 발생하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1.15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0.53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하여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일본, 아일랜드 등에 이어 열한 번째로 발생률이 낮다. 다만, 전체 살인범죄 발생률 순위가 하위 세 번째인 것과 비교할 때 남성 살해에 비하여 여성 살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그림 X-4).

[그림 X-4] OECD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여성 살해 발생 건수,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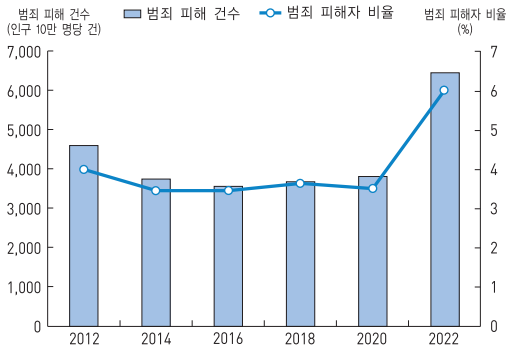
주: 1) OECD 평균은 자료가 없는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을 제외한 35개국 평균임.
출처: UNODC, *United Nations Crime Trends Survey*, 2022.

범죄 피해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집계하는 공식 범죄통계로는 신고되지 않은 범죄, 즉 ‘숨은 범죄(hidden crimes)’를 파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09년부터 2년마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직전 연도의 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인구 10만 명당 개인 대상 범죄 피해 건수는 2012년 4,600건에서 2014년 3,743건, 2016년 3,556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3,678건, 2020년 3,806건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2022년에는 증가 폭이 커서 6,439건에 이른다. 범죄피해자 비율 역시 유사한 추이를 보여서, 2012년 3.98%에서 2014년과 2016년에는 3.46%로 감소하였고, 그 후 증가 추세로 2018년 3.63%, 2020년 3.50%, 2022년 6.00%이다 (그림 X-5).

[그림 X-5] 개인대상 범죄 피해 건수와 피해자 비율, 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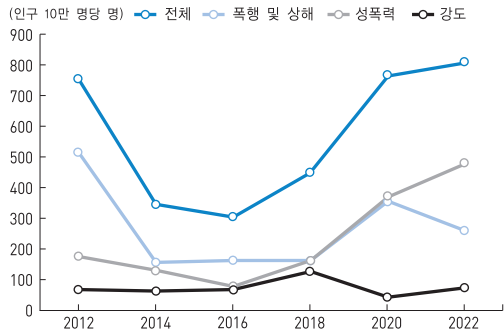


주: 1) 범죄피해 건수는 만 14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2) 범죄 피해자 비율은 만 14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사기,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의 개인 대상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각 연도.

폭행·상해, 성폭력, 강도 등과 같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범죄 피해는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755건의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6년 303건까지 줄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서 2022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808건까지 증가하였다(그림 X-6).

[그림 X-6] 폭력범죄 유형별 피해 건수, 2012-2022



주: 1) 통계치는 만 14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지난 1년간 폭행(협박 포함) 및 상해, 성폭력, 강도 등 개인 대상 폭력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총 피해 건수임.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각 연도.

한편, 폭력범죄 유형에 따라 피해 경험률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2022년을 기준으로 폭행 및 상해 범죄 피해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258건이며, 성폭력범죄는 478건, 강도범죄는 72건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범죄 유형인 폭행 및 상해(협박, 괴롭힘 포함)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피해건수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크게 증가하였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조사가 진행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인구 10만 명당 강도범죄 피해건수는 2018년의 소폭 증가를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인적사고 및 자연재난

사고로 인한 사망(외인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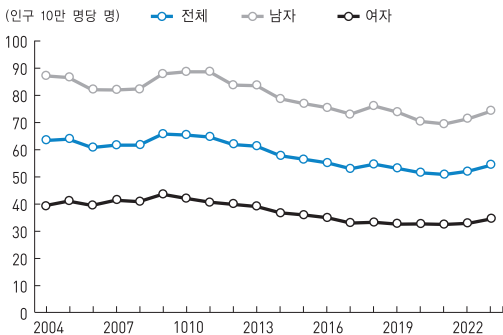
최근 20년간 사고, 자살, 타살 등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4년 인구 10만 명당 63.4명에서 2009년 65.8명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23년에는 54.4명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소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성별로 살펴보더라도 지난 20년간 남성과 여성의 외인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2022년과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남성 외인 사망률은 2004년 87.2명에서 2021년 69.5명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후 소폭 증가하여 2023년 74.3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2004년 39.4명에서 2021년 32.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34.6명으로 증가하였다. 남성의 외인 사망률은 여성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보다 높고 사고위험이 높은 활동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X-7).

모든 연령대의 외인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15세 미만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층의 외인 사망률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2004년에 15세 미만 인구 10만 명당 10.8명이 인체 외부 요인으로 사망한 반면, 2023년에는 4.4명으로 59.3%나 감소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10만 명당 248.1명에서 138.2명으로 줄어 감소율은 44.3%이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의 외인 사망률은 가장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56.5명에서 40.3명으로 28.7% 줄었다(그림 X-8).

[그림 X-7] 성별 외인 사망률, 200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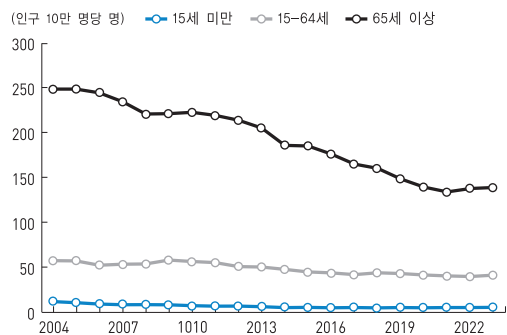


주: 1) 외인 사망률=인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그림 X-8] 연령별 외인 사망률, 2004-2023



주: 1) 외인 사망률=해당 연령집단 인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해당 연령집단 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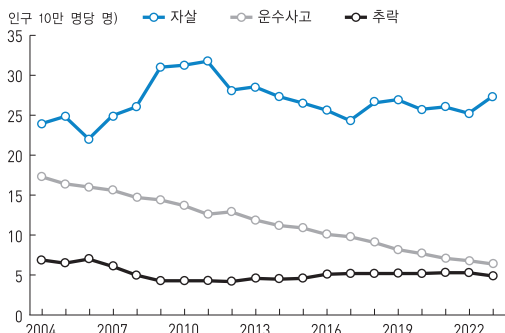
2) 외인 사망은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고의적 자해(자살, 가해타살), 기타 외인 등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지난 20년간 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으로 이 중 가장 주된 요인은 자살이다. 자살률은 2004년 인구 10만 명당 23.9명에서 2011년 31.7명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대체로 감소하여 2023년 27.3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20년 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운수사고 사망률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04년 인구 10만 명당 17.3명에서 2023년 6.4명으로 줄었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6년 인구 10만 명당 7.0명에서 서서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4.9명으로 집계되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 25.2명에 비해 증가하였고, 운수사고는 전년도 6.8명에서 6.4명으로 감소하였다. 추락사고는 인구 10만 명당 5.3명에서 4.9명으로 줄었다 (그림 X-9).

[그림 X-9] 주요 외인별 사망률, 2004-2023



주: 1) 사망률=해당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0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자연재난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는 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해 발생했다. 대규모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모두 한반도 내륙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6년 에위니아 등 초대형 태풍은 수조 원의 재산피해와 대규모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2007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나 인명손실이 크게 줄었는데, 이는 저류지 확대, 배수로 확보 및 산사태 방지 등 자연재해 대비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다음 해인 2021년에는 크게 감소하는 등 등락은 있으나, 사망 및 실종자 수는 2018년 이후, 재산피해액은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22년에는 2021년에 감소하였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다시 증가하였다. 사망 및 실종자 수는 2021년 42명에서 64명으로 증가하였

[그림 X-10]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2003-2022



주: 1) 재산피해액은 2022년 환산가격 기준임. 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각 연도.



고, 재산피해액 역시 2021년 716억에서 5,92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X-10).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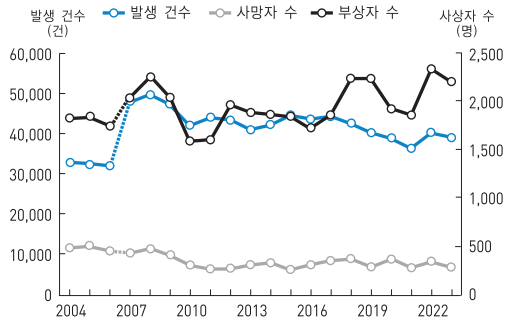
화재 발생 건수는 2007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국가화재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매년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2020년 이후에는 소폭 증감은 있으나 대체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화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적 재난이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다. 지난 20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소폭의 등락이 있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화재 초기 진압률이 높고 화재 발생 시 인명 구조와 이송 및 치료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화재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200~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화재로 인한 부상자 수는 지난 20년간 다소 큰 폭의 등락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8년을 정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0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 이후에는 대체로 2,0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2022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3년에는 화재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모두 감소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화재 발생 건수(3만 8,857건)는 전년 대비 3.1% 감소하

였고, 부상자 수(2,194명)는 5.7%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283명)는 17.0% 감소해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크다(그림 X-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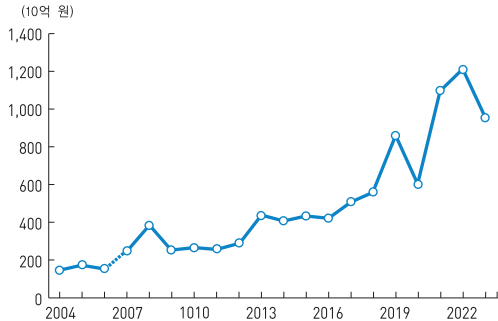
[그림 X-11] 화재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2004-2023



주: 1) 2007년부터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됨.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각 연도.

한편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4년 1,466억 원이었던 재산피해액은 2022년도에 최근 20년간 최고치인 1조 2,104억 원으로 집계되어 약 8배 증가하였다. 이는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되고 건축물의 재

[그림 X-12]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 2004-2023



주: 1) 2007년부터 임야 및 가스폭발 화재가 화재 통계에 포함됨.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연감」, 각 연도.

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2023년에는 재산피해액이 전년 대비 21.2% 감소하여 9,529억 원이다(그림 X-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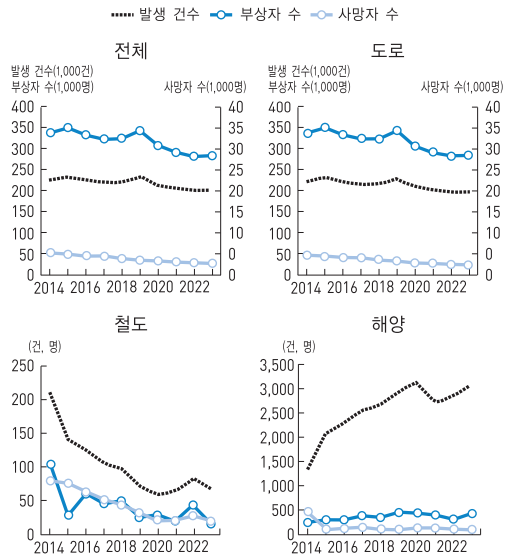
교통사고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경우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민식이법’ 추진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사고 발생 건수 역시 증감을 반복하다 2020년부터 감소 추세이다. 도로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사고 부상자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과 대조적이다. 철도사고는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양사고의 경우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예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3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만 1,474건으로 전년 19만 9,806건 대비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철도사고는 전년도 82건에서 68건으로 감소하였고 해양사고는 전년도 2,863건에서 3,092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모든 교통사고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그림 X-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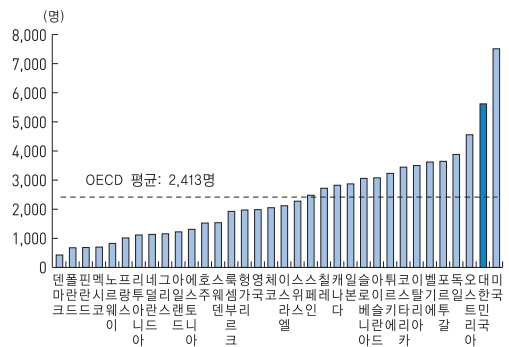
[그림 X-13]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2014-2023



주: 1) 전체 교통사고 통계의 경우 항공사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24.

2021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평균 2,413명이 도로교통사고로 부

[그림 X-14] OECD 국가의 인구 100만 명당 도로교통 사고 부상자 수, 2021



주: 1) OECD 평균은 자료가 없는 콜롬비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34개국 평균임.
출처: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3, 2023.



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21년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5,627명으로 비교 대상 34개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인구 대비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인구 100만 명당 7,502명이다. 반면 덴마크(445명), 폴란드(697명), 핀란드(701명) 등의 국가는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그림 X-14).

당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소방관 수는 2014년 4만 406명에서 2023년 6만 6,797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1,287명에서 777명으로 39.6% 감소하였다. 경찰관 수는 2014년 10만 9,364명에서 2023년 13만 1,046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469명에서 393명으로 16.2% 감소하였다(표 X-2).

경찰력 및 소방력

최근 10년 동안 경찰관과 소방관 정원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담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관 1인당 담

〈표 X-2〉 경찰관 및 소방관 수,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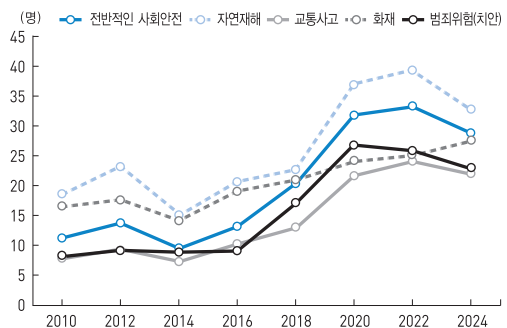
연도	경찰관		소방관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정원 수	1인당 담당 인구
2014	109,364	469	40,406	1,287
2015	113,077	456	42,634	1,224
2016	114,658	451	44,121	1,186
2017	116,584	444	48,042	1,091
2018	118,651	437	51,779	1,004
2019	122,913	422	56,639	926
2020	126,227	411	60,994	859
2021	128,985	400	64,768	807
2022	131,004	393	66,659	780
2023	131,046	393	66,797	777

주: 1)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주민등록인구÷경찰관 정원 수.
 2)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주민등록인구÷소방관 정원 수.
 출처: 경찰청, 「2023년 경찰통계연보」, 2024.
 소방청, 「2024년 소방청 통계연보」, 2024.

안전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그림 X-15]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4년 9.5% 이후 2022년 33.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28.9%로 큰 폭으로 감소

[그림 X-15]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2010-2024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3세 이상) 중 해당 분야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화재 영역을 제외한 자연재해, 교통사고, 범죄위험(치안) 영역 모두에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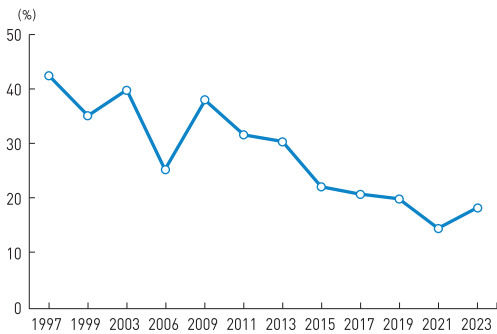
안전에 대한 인식은 조사 시점에서 안전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14년의 경우,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위험 등 전 영역에 걸쳐 안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이후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역시 감소하고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 분석 결과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

율은 1997년에는 42.4%, 2009년에는 37.9%에 이르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3년에는 18.2%로 떨어졌다. 지난 20여 년간 소폭의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수준은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 X-16).

OECD의 *How's life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9.5%로 OECD 평균(74.9%)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며, 노르웨이(92.0%), 슬로베니아(90.6%), 룩셈부르크(88.3%)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칠레(37.1%), 콜롬비아(44.8%), 멕시코(46.6%) 등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그림 X-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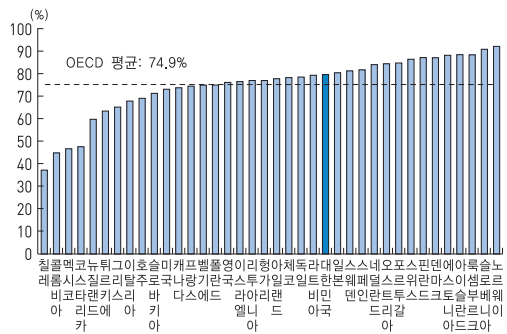
[그림 X-16]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1997-2023



주: 1) 통계치는 전체 조사대상자(만 14세 이상) 중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13년부터 표준화가중치가 적용된 수치임.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1997-2006; 「전국범죄피해조사」, 2009-2023.

[그림 X-17] OECD 국가의 야간보행안전도, 2023



주: 1) 야간보행안전도는 각국 조사대상자(15세 이상) 중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2024: Well-being and Resilience in Times of Crisis*, 2024.